

美 무역법 301조 고비 넘긴 韓… 과잉생산 추가 부과엔 ‘촉각’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조사 확정
한·일·스위스 우대그룹 분류
기존 세율 낮으면 총 12.5% 적용

정부, ‘15% 마지노선’ 준수 촉구
과잉생산 조사 결과 하반기 변수

美 행정부·의회·업계 전방위 설득
디지털 법·정책 차별 우려 해소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등 최근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국내 디지털 법·정책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미(對美)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전개했다.

특히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한국을 우대 그룹에 포함시켰으나, 향후 과잉생산 분야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상존해 정부의 후속 협상이 올 하반기 통상 환경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기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부·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 양국 경제·통상 관계 및 당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교적 우대받는 그룹에 포함시키며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한국을 일본, 스위스와 함께 우대받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관세가 12.5% 수준이 되도록 적용받는다. 기존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301조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아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기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7월 24일 법적시한)에 새로운 301조 관세 체계가 확정되면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취지다.

여 본부장은 방미 첫날인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데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하워드 러트니 상무부 장관을 차례로 면담하고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통상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모두 합한 한국산 일반 품목의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합의한 마지노선인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관세·비관세 현안이 큰 틀에서의 한·미 경제·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역시 기존 무역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따른 구체적인 관세 부과 방식 등은 우리 측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과잉생산 분야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비용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비한 치밀한 2단계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 의회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국의 디지털 법·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공을 들였다. 구글, 애플, AWS, 쿠팡 등 주요 디지털 기업을 비롯해 바이오·금융·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미측 우려를 직접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디지털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빌 해거티 상원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소위원회장, 앤디 킴 상원의원 등 상·하원 의원 10명을 연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韓, 드론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ISO, 사이버보안 작업반 신설 승인
이종혁 세종대 교수 초대 의장 선임
韓 제안 국제표준화 작업 공식 착수

급성장하는 드론 산업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표준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무인기(드론) 분과위원회(ISO/TC20/SC16) 제21차 총회에서 ‘드론 사이버보안 표준 작업반(WG10)’의 신규 설립을 승인하고, 한국의 이종혁 교수(세종대 정보보호학과)를 초대 의장으로 선임했다.

드론은 최근 안보, 공공 서비스, 취미 등 전 방위적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영상정보 유출, 기체 탈취, 위치 교란 등 해킹 및 보안 우려 역시 비례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작업반(WG) 신설은 글로벌 회원국들이 드론 사이버보안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자폭 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표준화의 시급성에 공감한 결과다.

한국은 국내 우수한 사이버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작업반 설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총회에서는 작업반 승인과 동시에 한국이 제출한 드론 사이버보안 국제표준화 작업(ISO/AWI 26390)이 공

식 착수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한국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물류 드론 운용절차, 레이더 센서 시험방법, 소음시험 방법 등 총 8건의 드론 관련 신규 표준 작업을 추가로 제안했다. 해당 제안들은 향후 회원국 투표를 거쳐 표준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현재 ISO에서 개발 중인 드론 표준 26건 중 7건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을 만큼, 우리 전문가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며 “11월에 있을 서울 총회 등 관련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드론 표준 강국으로 올라서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SO 무인기 분과위원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27개 정회원국과 브라질과 체코 등 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며, 차기 총회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187명 공개채용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원서 접수

한국마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해 경마지원직 18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오는 8월 5일 오후 6시까지 한국마사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경마지원직은 구매권 발급, 고객지원, 고객구호 등 경마 시행을 돕는 무기계약직이다. 주 2일(총 15시간) 근무 조건으로, 4대 보험 가입을 비롯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이 보장된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로 학력, 성별, 전공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입사지원서 접수부터 면접에 이르기까지 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완전히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해 채용의 공정성을 한

층 강화했다.

채용 분야는 ▲진행직 177명 ▲발매직 6명 ▲고객구호직 4명 등 총 3개 분야다. 근무지는 랫츠런파크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사업장, 광주·천안지사, 장수목장 등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사회형평직 채용 확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형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진행직 중 10명은 보훈대상자 제한경쟁으로 별도 선발하며, 고객구호직의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응급구조사 1·2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마사회는 지원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배려해 수도권 지원자는 과천 본사에서, 지방 사업장 지원자는 장수목장과 광주·천안지사 등 실제 근무하게 될 해당 사업장에서 면접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ECO 에너지 안전지원센터’ 개소

삼척 원덕읍 시니어 14명 채용

한국남부발전이 강원도 삼척시에 지역 맞춤형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상생 기지를 마련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24일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역 자활기관과 협력해 구축한 ‘ECO 에너지 안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CO 에너지 안전지원센터는 만 60세 이상 원덕읍 거주 어르신 14명을 채용해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 교육을 모두 마쳤다. 선발된 시니어 인력은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환형 에너지 증진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전 돌봄

등 3대 핵심 상생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서는 지역 주민과 기업 간의 따뜻한 상생의 모습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원덕읍 노인일자리 참여자 일동은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뜻을 담아 임경규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장에게 직접 제작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경규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뜻을 모아 전달해 주신 감사패인 만큼 그 어떤 상보다 더욱 뜻깊고 값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상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립공원공단,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전국 위험지역 249곳 사전 점검

내달 31일까지 시설·인력 집중 배치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물놀이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지난 5월까지 전국 물놀이 지역 249곳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해 순찰과 계도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형적 특성에 맞춰 산악형과 해상·해안형으로 구분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대거 투입된다. 먼저 지리산, 설악산 등 산악형 국립공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물놀이 관리지역(110곳)과 출입이 금지된 위험지역(103곳)을 철저히 구분해 관리한다. 특히 지능형 폐쇄회로(CC)TV 86대, 구명환 210개, 입수방지 그물망 55개 등을 설치하고, 입수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 시간대(오후 12시~6시)에 안전

인력 470명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안, 한려해상 등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에서는 지자체 및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했다. 구명조끼를 비롯한 수난 구조장비 311점과 전담 인력 170명을 현장에 전면 배치했으며, 위험구역 출입통제와 조식(밀물·썰물) 위험경보시설 운영, 현장 계도 방송 등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피서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다각도로 전개된다. 현장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는 물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전국 267개의 문자전광판을 통해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